

우리나라 청렴도 수준파악에 관한 연구: 국가청렴도 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산정에 활용되는 원천 자료상의 설문문항을 중심으로* **

A Study of the level of Integrity in Korea: Focused on Questionnaire Item
of Original References for Measuring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이 정 주(Lee, Chung-joo)***·윤 은 기(Yun Eun Gee)****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provide the analysis of reality about the corruption of Korean society by comparing and analyzing the assessment results with researching the contents of questionnaire item and original reference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which measure CPI(Corruption Perceptions Index) in Korea. This paper explains the assessment results in terms of the level of Korean corruption provided by World Justice Project Rule of Law Index(WJP), Bertelsmann Foundation Sustainable Governance Indicators(BF, SGI), World Economic Forum Executive Opinion Survey(WEF), and Bertelsmann Foundation Transformation Index(BF, TI). The results of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according to the research of World Justice Project Rule of Law Index(WJP), the abuse of politician power and authority through the cozy relations between politics and business is more serious in comparison with public officials in the executive, judiciary, police, and military. Second, according to the report of Bertelsmann Foundation Sustainable Governance Indicators(BF, SGI), even if the mechanism of integrity is more or less operating to prevent the abuse of power and authority, it is not effective to prevent the abuse of the authority of public officials in Korea. Third, World Economic Forum Executive Opinion Survey(WEF) indicates that Korea is respectively 1.86 and 1.49 times more the abuse of public funds and bribery than New Zealand which is very clean country in the field. Fourth, Bertelsmann Foundation Transformation index(BF, TI) describes that the possibility of criminal punishment and prosecution of public officials who have abused power and authority seems to be low, compared with Singapore, Taiwan, and Uruguay. Also, it is analyzed that the successful measure to prevent corruption is usually low, compared with Singapore and Taiwan.

Key Words: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Original References of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Questionnaire Item for Measuring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 이 논문은 2013년도 동아대학교 학술연구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2013년 감사원 연구용역 “부패인식 개선을 위한 정부의 역할에 관한 연구”의 일부를 발췌하여 논문으로 발전시켰음

*** 서울시립대학교 반부패시스템연구소 연구위원/ 경희대 겸임교수

**** 동아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I. 서론

부패라는 속성은 개인뿐만 아니라 개인이 속한 사회와 국가를 파멸시키는 암과 같은 존재로 평가받고 있다. 청렴수준이 낮을 경우 국가경쟁력 저하, 사회통합 저하, 정부불신 등과 같이 우리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기 때문에 부패라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 사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직자 행동강령, 부패영향평가, 청렴교육, 부패 및 공익신고자 보호, 공공기관청렴도 조사, 반부패경쟁력평가 등과 같은 각종 반부패관련 제도의 시행을 통해 사회의 청렴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부패를 측정하는 가장 대표적인 평가 지수는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매년 발표하는 국가청렴도 지수(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¹⁾로 지난 4년간 평가점수를 보면 지속적으로 하락 또는 정체하고 있는 실정이다²⁾. 우리나라는 각종 반부패노력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에서 부패공화국이라는 이미지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부패현상에 대한 연구경향을 고려해 볼 때 국제사회에서 한국사회 부패를 바라보는 정확한 원인규명에 대한 노력이 부족하다. 특히 CPI와 같은 국제지수의 경우 대다수 외국 기업인의 관점이 반영되어 논의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국내부패연구는 주로 대다수 자국민을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져 국제적인 관점에서 원인규명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외국기업인의 경우 각국의 주재원과 현지법인장 등을 맡아 정·관·재계와 접촉하며 일상 속에서 발생하고 있는 국가별 부패 정도를 직접 비교 체험함(세계일보, 2013.07.15자)에 따라 한국사회의 부패를 자국민 보다 좀 더 객관적으로 파악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그동안 반부패에 대한 노력의 방식은 어떻게 보면 국제투명성 기구에서 발표하는 CPI 지수를 결정론적인 입장에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 경향이 많다. 그러다 보니 학계나 해당 기관의 입장에서 CPI를 구성하고 있는 각종 원천자료가 무엇이며, 각 원천자료에서 활용되는 설문문항이 무엇이며, 어떻게 산정되는지에 대한 CPI 지수 산정을 둘러싼 과정론적인 분석이 부족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2012년도부터 CPI 점수의 산정방식과 일부 관련 원천자료가 달라져³⁾ CPI 방법론과 관련 원천자료에 대한

1) 학자에 따라 국가청렴도 지수가 아닌 부패인식지수로 파악하기도 한다. 본 글에서는 점수가 높을수록 청렴한 것이 평가의 방식이기 때문에 부패인식지수보다 국가청렴도 지수라는 명칭을 사용하도록 한다.

2) 2012년도부터 국가청렴도 점수가 100점 만점으로 변경되어 이전 자료와 단순히 비교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과거 2008년 10점 만점 중 5.6점에서 2009년 5.5점, 2010년 5.4점, 2011년 5.4점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2012년도 100점 만점 중 56점으로 45위를 기록했는데 순위상으로 지난 2011년도 43위에 비해 2단계 떨어져 부패수준이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3) 2012년부터 10점 만점(1995년~2011년)이 아닌 100점 만점으로 점수 환산법이 달라졌으며, 2011년도 CPI의 원천자료는 13개 기관의 17개 자료를 활용한데 비해 2012년 원천자료는 12개 기관의 13개 자료를 활용하고 있다.

연구의 필요성이 증대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국제적인 평가지수인 국가청렴도 지수의 원천자료와 우리나라를 평가하는데 사용되는 원천자료의 설문문항의 분석과 함께 평가결과에 대한 실태분석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특히 원천자료 분석은 한국사회에서 청렴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향후 반부패 정책이 어떠한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지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데 의의가 있을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국가청렴도(CPI) 평가의 의의

국가청렴도 지수는 1995년부터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매년 발표하는 각국의 부패정도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평가방식으로, 각국의 부패정도에 대한 전문가들의 인식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취합한 결과이다. CPI지수는 100점 만점으로 우리나라는 2012년 56점(45위/176개국)을 기록하고 있다. 2011년까지는 1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다가 2012년부터 100점 만점으로 평가방식을 변경함에 따라 단순히 전년도와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순위 상으로 2011년도 43위에서 2012년도 45위로 2단계 하락하였다.

우리사회에 부패의 부정적인 영향은 셋 가지 측면에서 분석 될 수 있다. 첫째, 부패현상은 국가경쟁력저하로 이어질 것이다. 우리사회가 정경유착을 통한 부패가 심각하다고 평가받을 경우, 외국인들의 우리기업 또는 상품에 투자유치를 하는데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적용할 것이며, 우리기업들이 외국자본을 유치하는데 있어서도 부패한 국가의 기업이라는 인식으로 인해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둘째, 부패가 심각한 사회의 경우 사회갈등이 증대될 수 있을 것이다. 부패한 사회에서는 법을 지키면 손해라는 인식이 팽배할 것이며 기회주의가 양성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결국 이러한 구조 하에서는 유전무죄와 유권무죄가 작용하여 권력이나 돈을 가진 사회지도층에 대한 불신이 고조되어 사회계층 간의 갈등·대립·분열을 조장됨으로서 국민통합이 저해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셋째, 부패현상의 증가는 정부불신을 초래할 것이다. 부패한 정부로 낙인찍힐 경우 정부에 대한 국민적 시각은 상당히 냉소적일 것이다. 부패한 정부가 아닌 깨끗한 정부를 거듭 하기 위해 부단한 개혁을 하더라도 국민들은 그 진정성에 대해 상당히 의구심을 보일 것이며,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 놓더라도 그 진정성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작용하여 정책추진에 있어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부패방지를 통한 국가청렴도 개선을 위한 노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사항으로 오늘날 모든 국가의 중대 관심사라 할 수 있다.

그동안 우리의 국가청렴도 개선을 위한 노력의 경우 학문적이든 실무적이든 간에 국

가청렴도지수를 구성하는 원천자료가 무엇이며, 원천자료를 통해 평가결과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조사가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국가청렴도지수를 놓고 보았을 때 이는 대다수 외국 기업가나 외국 전문가가 우리사회를 바라보는 것임에도 우리의 반부패 정책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책대상집단이 주로 공직자이고, 공직자의 반부패정책 노력에 대한 효과성 평가는 주로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외국기업인이나 외국 전문가의 견해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가청렴도 지수를 구성하는 원천자료에 대한 평가주체가 외국 기업이나 전문가임을 감안해 이들이 판단하는 우리사회의 청렴수준을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부패인식개선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2. 국가청렴도 측정과 관련된 선행연구검토

국제투명성기구의 국가청렴도(CPI) 수준 측정과 직접 관련된 선행연구는 부족한 편이다. 아마도 이러한 경향을 보이는 이유로는 대다수의 연구가 국가청렴도(CPI)의 결과를 전제로 경제적 또는 사회적 상황을 반영하는 관련 변수와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연구를 해왔기 때문으로 보인다.

국가청렴도(CPI) 수준 측정과 관련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이상환(2002, 2004a, 2004b)과 신열(2008)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이상환의 연구(2002, 2004a, 2004b)는 주로 국가청렴도(CPI) 작성에 사용된 원천자료를 중심으로 분석방법론을 설명하면서 국가청렴도(CPI)가 지니는 한계점 및 개선방안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신열(2008)의 연구는 국제투명성기구의 국가청렴도 평가의 한계점을 인정하면서도 국제투명성 기구에서 발표한 우리나라의 국가청렴도지수(CPI)를 중심으로 주요 아시아 및 OECD국가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두 연구 모두 국가청렴도(CPI)가 어떻게 구성되고 측정되는지에 대해 과정보론적인 문제의식에서 시작된 것이 공통점이다. 하지만 전자의 연구는 CPI 지수 산정의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의 논쟁이고, 후자의 연구는 CPI 산정방법에 대한 한계점은 존재하나 CPI가 현재 국제사회에서 부패를 측정하는데 통용되고 있기 때문에 CPI 평가결과를 전제로 우리나라 청렴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과 관련된 문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2012년부터 CPI의 평균을 산출하는데 있어 원천자료 간에 우연오차(eventual error)를 최대한 보정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기존 측정방식의 문제점을 해소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국가청렴도지수 측정 방법론의 한계점을 지적하기보다 CPI 평가결과를 전제로 CPI 점수산정에 활용된 원천자료를 통해 우리나라의 청렴수준 실태파악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이 연구는 2011년에는 국가청렴도지수(CPI) 원천자료의 수가 17개인데 비해 2012년도에는 13개⁴⁾로 감소했다는 점과 기존 연구들이 원천자료상 부패와

4) 아래 <표1> 참고.

관련된 구체적인 설문문항의 내용을 정확히 분석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3. 국가청렴도(CPI) 평가 원천자료 및 방법론

1) CPI 원천자료

TI 부패인식지수 측정은 1995년부터 시작되었고 매년 실시되고 있다. 2012년 CPI는 176개국이 측정되었고, 총 13개의 원천자료가 이용되었다(TI, 2012). CPI를 구성하는 원천자료상 포함된 국가는 최소 15개국(Political Economic Risk Consultancy Asian Intelligence)에서 최대 175개국(Global Insight Country Risk Ratings)까지 이른다.

<표1> 2012 CPI 원천자료

	원천자료	대상 국가수
1	African Development Bank Governance Ratings (AFDB)	53
2	Bertelsmann Foundation Sustainable Governance Indicators (BF-SGI)	31
3	Bertelsmann Foundation Transformation Index (BF-BTI)	128
4	Economist Intelligence Unit Country Risk Ratings (EIU)	138
5	Freedom House Nations in Transit (FH)	29
6	Global Insight Country Risk Ratings (GI)	175
7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IMD)	59
8	Political and Economic Risk Consultancy Asian Intelligence (PERC)	15
9	Political Risk Services International Country Risk Guide (ICRG)	140
10	Transparency International Bribe Payers Survey (TI)	29
11	World Bank-Country Performance and Institutional Assessment(WB)	67
12	World Economic Forum Executive Opinion Survey (WEF)	147
13	World Justice Project Rule of Law Index (WJP)	97

출처: Joint Research Center, 2012, Corruption Perception Index 2012 Statistical Assessment, p. 8.

국가별로 최소 3가지 원천자료를 사용한 국가는 19개국(바베이도스, 부탄, 북한 등)이며, 최대 10개를 사용한 국가는 6개국(폴란드, 대한민국, 헝가리, 체코, 인도)으로 나타났다으며, 대부분의 국가는 7~8개의 원천자료가 활용되었다.

온라인상으로 모두에게 공개되고 있는 자료는 AFDB, BF(SGI), BF(BTI), FH, TI, WB, WJP, WEF 지수로 총 8개로 나타난 데 비해, 나머지 5개 자료인 EIU, GI, IMD, PERC, PRS은 해당 구독자 혹은 고객에게 한정하여 공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우리나라의 부패수준을 측정하는 CPI 원천자료로는 BF(SGI), BF(BTI), TI, WJP, WEF, EIU, GI, IMD, PERC, PRS 등이 포함되고 있다.

2) 방법론

(1) 이전의 방법론(1995년 ~ 2011년)

과거 지수산정에 있어, 원천자료를 공통적인 척도로 만들기 사용된 표준화 방법은 백분위수 연결법(matching percentiles)이다. 그러한 방식은 각 원천자료에 대한 국가별 순위를 고려한 것이다. 그것은 다른 분포(distribution)를 가진 자료를 종합하는데 유용하다. 또한 CPI(0, 10)의 범위 안에서 보고된 모든 점수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한다. 그런 다음 베타 변환을 통해 표준화한다. 이것은 CPI에 포함된 모든 국가사이에 표준편차를 증가시켜 유사한 점수를 가진 것처럼 보이는 국가들을 정확히 차별화할 수 있게 한다. 이 방법론의 주요한 한계는 국가별 순위는 고려되지만 주어진 원천자료 간의 상대적 거리는 고려되지 않기 때문에 정보손실(information loss)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즉 CPI의 주요 원칙 중 CPI의 평균을 산출하는데 있어 원천자료 간에 우연오차(eventual error)를 보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충실히 반영하지 못하는 단점이 존재하였다.

(2) 2012년도 방법론

2012년도 방법론은 이전 방법론과 달리 몇 가지 중요한 변화가 있었다. 중요한 것은 2012년도 방법론은 이전 방법론과 달리 수년 동안의 점수 비교를 가능케 한다는 점이다. 방법론의 변화를 고려해 볼 때 2012년도 CPI점수는 전년도의 점수와 비교할 수 없다. 따라서 매년 간 비교는 2012년 이후에 가능하다는 점이다. CPI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첫째 원천 자료의 선정, 둘째 원천자료의 표준화, 셋째 평균계산, 넷째 불확실성 측정 보고의 단계를 거친다. 원천 자료의 선정기준으로는 공공분야에서의 부패인식을 계량화 할 수 있고, 동일한 척도로서 다수의 국가의 점수와 순위를 산정하는데 신뢰할 만한 방법론을 사용하며, 신뢰할만한 기관이 정기적으로 반복해서 조사하며, 국가 간 차별화할 수 있는 충분한 점수변화를 허용하는지가 주요 논점이 된다.

원천자료는 0에서 100점으로 표준화된다. 0은 부패가 가장 높은 수준이며, 100은 부패가 가장 낮은 수준이다. 표준화 방식으로 자료의 평균을 공제하여 표준편차로 나누는 Z-score방식이다. 이러한 Z-score는 대략 45의 평균을 가지며 약 20의 표준편차로 조정된다.

$$\text{표준화 공식} = \frac{x_i - \text{평균}(x)}{\text{표준편차}(x)} \times \text{sign} \times 20 + 45$$

평균값 산정은 최소 세 가지 원천자료를 활용한다. 각 국가별 CPI 점수는 각 국가에

서 활용가능한 모든 자료의 표준화된 점수의 평균값으로 계산된다. CPI는 점수와 관련하여 국가에 있어 이용 가능한 원천자료상의 변이(variation)를 고려하기 위해 표준오차(standard error)와 신뢰구간(confidence interval)을 지닌다.

4. 우리나라의 국가청렴도(CPI) 측정에 활용되는 원천자료상의 부패설문문항

2012년도 국가청렴도(CPI) 측정 방식의 변화로서 CPI 측정에 활용된 원천자료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한다(TI, 2012). 특히 원천자료 내의 부패와 관련된 설문문항의 점수가 CPI 산정에 활용되기 때문에 부패측정에 있어 어떠한 설문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지가 중요할 것이다.

1) Bertelsmann Foundation Sustainable Governance Indicators(BF-SGI)

Bertelsmann 재단의 지속가능 거버넌스 지표(SGI)는 OECD 국가의 거버넌스와 정책 의사결정에 초점을 맞추어 각 국가의 개혁에 대한 욕구와 개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고 있다. 측정방식으로는 국제기관으로부터의 수집한 양적인 자료를 사용하여 측정한 다음 저명한 국가 전문가로부터의 질적인 평가를 통해 보완된다.

한편 부패와 관련된 설문문항으로 전문가가 “공직보유자가 자신들의 사적 이익을 위해 직위남용을 방지하는 정도가 어떠하다고 보십니까?”가 활용된다. 이 질문은 국가나 사회가 공직청렴성을 보장하기 위한 메커니즘<국가지출에 대한 회계; 정당자금조달규제; 정보에 대한 시민과 언론의 접근; 공직자 책임성(재산 신고, 이해충돌규정, 행동강령); 투명한 공공 조달시스템, 효과적인 부패에 대한 기소>이 공무원과 정치인으로 하여금 뇌물수수를 못하게 하는지의 정도를 전문가가 평가하는 것이다.

설문문항에 대한 점수는 1점에서 10점까지 주어지는데 가장 낮은 1점에서 2까지의 점수는 공직자가 사적 이익을 위해 그들의 직위를 남용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가장 높은 9점에서 10점까지의 점수는 부패방지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작동하여 공직자가 그들의 직위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2) Bertelsmann Foundation Transformation Index (BF-BTI)

BTI는 128개 국가를 대상으로 심층 평가한 결과에 근거하여 상태지수(status index), 경영지수(management index)와 같은 두 가지 지수를 발표한다. 한편 이들 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설문문항 중 부패와 관련하여 관련 전문가가 이를 평가한다. 첫 번째 설문문항으로는 “직위를 남용한 공직자가 기소되거나 형사처벌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이며 이에 대해 응답결과로, 1점에서 2점인 낮은 점수대에는 법률을 위반하여 공직자가 부패

적인 행위를 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9점에서 10점의 높은 점수대에는 법률을 위반하고 부패에 가담한 공직자가 법적으로 형사처벌 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두 번째 설문으로는 “정부가 부패를 성공적으로 방지하는 정도는 어떠한가?” 이며 이에 대한 응답결과로 1에서 2점인 낮은 점수대에는 정부가 부패를 억제하는데 실패하고 있으며 부패방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9점에서 10점의 높은 점수대에는 정부가 부패를 억제하는데 성공적이며, 부패방지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제대로 작동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3) Economist Intelligence Unit Country Risk Ratings (EIU)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은 영국의 시사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 조사기관으로 전 세계 정책결정자에게 기업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자문기관으로 성장하고 있다. 특히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의 국가위험평가는 140개 국가 이상의 금융 분야에 대한 위험분석을 제공하고 있다.

한편 부패와 관련된 질문으로는 “공적자금의 할당과 사용에 대한 명확한 절차와 책임이 존재하는지”, “장관이나/공직자가 사적이나 정당정치목적으로 공적자금을 부당하게 유용하지 않는지”, “책임성을 물을 수 없는 특별 자금이 존재하는지”, “공적 자원에 대한 일반적인 남용이 존재하는지”, “전문화된 공무원조직이 존재하는지 혹은 상당수의 공무원이 정부에 의해 직접적으로 임명되는지”, “공적 자금 관리에 대한 독립적인 회계 감사기관이 존재하고 있는지”, “장관/공직자를 남용죄로 판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독립적인 사법부가 존재하는지”, “계약을 확보하고 호감을 사기위해 뇌물을 지급하는 관행이 존재하는지”가 포함된다. 질문에 대한 점수는 0점에서 4점까지이며 0점에 가까울수록 부패의 발생정도가 가장 낮으며 4점에 가까울수록 부패의 발생정도가 가장 높음을 의미한다.

4) Global Insight Country Risk Ratings (GI)

Global Insight Country Risk ratings 시스템은 1999년 이후 운영되고 있으며 200여 개 국가에게 위험환경의 6개 요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되고 있다. 6개의 요인은 정치적 위험, 경제적 위험, 법적 위험, 과세운영상의 위험, 보안위험, 위험인물 등이다. CPI 원천자료에 사용된 점수는 운영위험(operational risk)으로부터 주로 인용한다. 부패와 관련된 구체적인 질문은 사업허가(business permit), 호의적인 정책(favourable policy), 사업기획결정(planning decision)과 관련되는데, 기업경영과 관리의 환경과 여건을 전문가가 평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평가점수는 1점(최소의 부패)에서 5점(최대 부패) 사이를 측정한다.

5)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IMD)

IMD의 세계경쟁력연감(WYC)은 사회적·정치적·경제적인 풍토가 기업경쟁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지를 평가하여 국가의 경쟁력을 측정한다. 이때의 국가경쟁력이라 함은 기업의 가치생산과 국민들의 번영을 유지 및 조성할 수 있는 국가의 능력을 의미한다. 부패와 관련된 설문문항으로 “뇌물과 부패가 존재하는지 아니면 존재하지 않는지”에 대한 질문이 주어지며 기업인이 이를 평가한다. 그리고 질문에 대한 점수는 1에서 6점 척도로 주어진 다음 0점에서 10점 척도로 변환된다. 이 경우 0점은 가장 높은 부패수준을 의미하고 10점은 가장 낮은 부패수준을 의미한다.

6) Political and Economic Risk Consultancy Asian Intelligence (PERC)

1976년에 설립된 PERC는 아시아 각국에 상주 연구원을 두고 각 나라 정치·경제 이슈 분석 및 국가·기업 리스크 관리를 자문하는 업체다. PERC는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기업활동을 하는 기업에게 그 지역의 기업정보를 제공하는 전문가 컨설팅 업체를 의미한다. 지난 20여 년 동안 외국 기업인 1000-2000명을 대상으로 현지 부패 정도(가장 부패 10점-가장 청렴 0점)를 평가하는 설문 조사를 실시해 발표해왔다. 외국 기업인들이 현지에서 정(政)·관(官)·재계(財界)와 접촉하기며 일상 속에서 체험하는 부패 정도를 평가하는 것이다. 이들은 정치인, 관료, 사법 및 과세당국, 군대, 감사원 등의 부패를 0-10점으로 평가하는데, 설문에는 정부의 부패척결 의지와 부패를 대하는 태도, 기업의 뇌물문제, 기업 내부의 대응 수준까지 포함되었다. 종합평가는 총 19개 항목의 점수를 종합·산출한 ‘부패점수’로 이루어진다.

부패와 관련된 구체적인 질문은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기업인이 평가한다. 첫 번째로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공무원 등이 부패가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는 정도”와 관련된 설문문항이다. 두 번째로 “부패가 경찰, 법원, 관세청, 국세청, 감사원, 군대, 정부의 인허가 기관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설문문항이다. 질문에 대한 점수는 0점에서 10점까지이며 0점에 가까울수록 부패의 발생정도가 가장 낮으며 10점에 가까울수록 부패의 발생정도가 가장 높음을 의미한다.

7) Political Risk Services International Country Risk Guide (ICRG)

1980년에 설립된 ICRG는 금융, 경제, 정치적 위험을 예측하는 국제 보고서를 발간한다. ICRG의 분석은 금융, 경제, 정치적 위험에서 현재의 사업과 투자에 대한 정책결정을 하는데 유용한 수단으로 평가되고 있다. 국제 국가 위험 보고서(ICRG)에서 복합 국

가 위험 지수는 정치 위험 지수 100점, 금융 위험 지수 50점, 경제 위험 지수 50점에서 세 가지 지표의 합에서 2로 나누어 측정된다. 0에서 100까지의 복합 점수로 매우 높은 위험 (0-49.9점)과 매우 낮은 위험 (80-100점)의 범주로 구분되는데, 정치 위험, 금융 위험, 경제 위험의 세 가지 주요 범주로 분류하고 22개의 구성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ICRG의 분석은 정치, 금융, 경제의 위험 요소에 대한 전반적인 위험에 대한 평가를 통해 국가 종합 위험 지수를 제공한다.

한편 부패와 관련된 설문문항은 “과도한 후원(patronage), 친족등용(nepotism), 비자금, 정경 유착 관계와 같은 형태로 실질적이거나 잠재적인 부패의 정도가 어떠한지”로 구성되며 이를 관련 전문가가 평가한다. 질문에 대한 점수는 0점에서 6점까지이며, 0점에 가까울수록 부패의 잠재적인 위험이 가장 높으며 6점에 가까울수록 부패의 잠재적인 위험이 가장 낮음을 의미한다.

8) Transparency International Bribe Payers Survey (TI)

국제투명성 뇌물공여 서베이는 전 세계 30개 국가에서 국내·외 기업 간부들이 기업 활동을 하는데 있어 뇌물과 부패에 대한 인식을 기업인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방식이다. 부패를 측정하는데 조사응답자에게 두 가지 질문이 주어지는데 첫째, “당신의 입장에서 볼 때 이 국가에서 공무원의 뇌물을 요구하거나 수용하는 것이 얼마나 보편적이라 보십니까?”와 둘째, “당신의 입장에서 볼 때 이 국가에서 사적 이익을 위해 공공기금의 남용이 얼마나 발생하는가?”이다. 각 질문의 점수는 1점부터 5점사이로 주어지며, 1점은 없음이며 5점은 매우 보편적임을 의미하며 두 질문의 결과는 하나의 평균점수로 산정된다.

9) World Economic Forum Executive Opinion Survey (WEF)

이 조사 결과는 세계 경쟁력 지수의 측정을 위해 네트워크 지수, 복합 무역환경지수, 여행 관광 경쟁력 지수, 금융 발전 지수, 성 차별 지수, 지역적인 조사를 포함한 지수들을 측정하고 있다. 이 조사 결과는 오랫동안 공공과 민간 조직에서 정치적인 전략과 경제적인 투자 결정을 위한 자료들로 이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서 국제 투명성 기구는 이 조사 정보를 그들의 부패 인식 지수와 뇌물 공여 지수를 측정 하는데 사용된다. 경제 협력 개발기구와 국제 통화 기구와 같은 세계 기관들은 이 자료들을 참조하고 있다. 세계 경제 포럼은 연간 조사를 30년 넘게 연간조사들을 수행하였고, 2013년의 조사는 2013년 1월에서 5월 사이에 사업자들의 의견들을 조사하였고, 전체 148개국의 13,638의 조사대상자들을 통해 평가하였다.

부패를 측정하는데 있어 조사응답자에게 두 가지 질문이 주어지며 기업인이 이를 평가한다. 첫 번째 질문으로 “당신의 국가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a.수출입 b.공동시설 c.

납세 d.공적계약 및 라이선스 지급 e.호의적인 사법적 판단을 획득하는 것)에 대해 회사의 비자금 조성 및 뇌물수수가 얼마나 보편적인가”이며 두 번째 질문으로는 “당신의 나라에서 부패로 인해 기업, 개인 그룹, 공공기금의 남용이 얼마나 보편적인가”이다. 각 질문은 1점부터 7점까지 점수가 주어지며, 1점은 매우 보편적이며 7은 전혀 없음을 의미한다. 질문에 대한 점수산정방식으로는 첫 번째 질문의 경우 a부터 e까지 평균을 구해 하나의 점수로 집계된다.

10) World Justice Project Rule of Law Index(WJP)

WJP는 기회와 평등이 넘치는 공동체의 진전을 위한 법치주의를 향상시키기 위한 독립된 비영리조직으로 법치주의와 다학문적 협력의 상호보완적인 전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법치주의는 기회와 평등이 넘치는 공동체를 설립하는 것이고, 다학문적 협력은 법치주의 증진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활용된다.

부패를 측정하는데 사용되는 설문은 주로 사적이익을 위해 공직자가 공직을 사용하는 지에 대한 정도를 묻는 것으로 전문가와 일반인이 함께 평가한다. 해당 설문문항으로 “행정조직에 있는 공직자는 사익을 위해 공직을 활용하지 않는 정도”, “사법조직에 있는 공직자가 사익을 위해 공직을 활용하지 않는 정도”, “경찰 및 군의 공직자가 사익을 위해 공직을 활용하지 않는 정도”, “입법기관에 있는 공직자가 사익을 위해 공직을 활용하지 않는 정도”가 포함된다.

11) 종합적 논의

이상의 논의를 통해 지금까지의 우리나라 CPI 측정의 원천자료에서 지수 산정에 활용되는 설문문항을 종합해 보면 사적이익을 위한 공직남용의 정도와 공적 자금의 유용과 같이 부패의 개념에 입각한 설문문항이 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부패를 바라보는 정치인 및 공직자의 태도, 부패의 관행화 정도(뇌물이나 비자금 조성에 대한 부패의 관행화보편화 정도), 부패의 파급효과(부패가 공공기관에 미치는 영향력 정도), 부패실제경험(사업허가나 유리한 정책판단을 이끌어내기 위한 부패경험 정도), 부패의 통제기능(독립적인 회계감사기구나 사법부의 존재, 부패행위에 대한 기소 및 처벌정도, 정부의 반부패정책의 실효성 정도)과 관련된 질문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2> CPI 원천자료 제공기관별 설문문항 및 평가주체

원천자료 제공기관	설문문항	평가주체
Bertelsmann Foundation Sustainable Governance Indicators (BF-SGI)	“공직보유자가 자신들의 사적 이익을 위해 직위남용을 방지하는 정도가 어떠한가 보십니까?”	전문가
Bertelsmann Foundation Transformation Index (BF-BTI)	“직위를 남용한 공직자가 기소되거나 형사처벌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 “정부가 부패를 성공적으로 방지하는 정도는 어떠한가?”	전문가
Economist Intelligence Unit Country Risk Ratings (EIU)	“공적자금의 할당과 사용에 대한 명확한 절차와 책임이 존재하는가?” “장관이나/공직자가 사적이나 정당정치 목적으로 공적자금을 부당하게 유용하 지 않는가?” “책임성을 물을 수 없는 특별 자금이 존재하는가?” “공적 자원에 대한 일반적인 남용이 존재하는가?” “전문화된 공무원조직이 존재합니까? 혹은 상당수의 공무원이 정부에 의해 직접적으로 임명되는가?” “공적 자금 관리에 대한 독립적인 회계감사기관이 존재하고 있는가?” “장관/공직자를 남용죄로 판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독립적인 사법부가 존재하는가?” “계약을 확보하고 호감을 사기 위해 뇌 물을 지급하는 관행이 존재하는가?”	전문가
Global Insight Country Risk Ratings (GI)	기업 활동을 하는데 있어, 특히 사업허가(business permit), 호의적인 정책(favourable policy), 기획결정(planning decision)의 과정에서 실제 부패경험정 도	전문가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IMD)	“뇌물과 부패가 존재하는지 아니면 존재 하지 않는지?”	기업인
Political and Economic Risk Consultancy Asian Intelligence (PERC)	“다음과 같은 직위(position)에서 부패가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는 정도는 어떠한가?” · 국가수준의 정치리더(대통령) · 도시와 다른 지역 수준의 정치적 리더(지방자치단체장) · 국가공무원 · 지방공무원 “부패가 다음과 같은 기관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 는 정도는 어떠한가?” · 경찰 · 법원 · 관세청 · 국세청 · 정부인허가기관 · 감찰기관 · 군대	기업인

원천자료 제공기관	설문문항	평가 주체
Political Risk Services International Country Risk Guide (ICRG)	과도한 후원(patronage), 친족등용(nepotism), 직장예약(job reservation), 호의교환, 비밀스러운 정당자금, 그리고 정치인과 기업과의 의심스러운 밀착관계와 같은 형태로 실질적이거나 잠재적인 부패와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지의 정도	전문가
Transparency International Bribe Payers Survey (TI)	“당신의 입장에서 볼 때 이 국가에서 공무원의 뇌물을 요구하거나 수용하는 것이 얼마나 보편적이라 보십니까?”, “당신의 입장에서 볼 때 이 국가에서 얼마나 사적 이익을 위해 공공기금의 남용이 발생하는가?”	기업인
World Economic Forum Executive Opinion Survey (WEF)	“당신의 국가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a.수출입 b.공동시설 c.납세 d.공적계약 및 라이선스 지급 e.호의적인 사법적 판단을 획득하는 것)에 대해 회사의 비자금 조성 및 뇌물제공이 얼마나 보편적인가?” “당신의 나라에서 부패로 인해 기업, 개인 또는 그룹에 대한 공공기금의 남용이 얼마나 보편적인가?”	기업인
World Justice Project Rule of Law Index(WJP)	·행정조직에 있는 공직자는 사익을 위해 공직을 활용하지 않는다. ·사법조직에 있는 공직자는 사익을 위해 공직을 활용하지 않는다. ·경찰 및 군의 공직자는 사익을 위해 공직을 활용하지 않는다. ·입법기관에 있는 공직자는 사익을 위해 공직을 활용하지 않는다.	전문가 와 일반인

III. 우리나라 국가청렴도(CPI) 평가 원천자료 실태 분석

국제사회의 우리나라의 청렴수준의 분석에서 국가청렴도 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원천 자료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먼저 원천자료는 국가청렴도(CPI)를 구성하기 때문에 국가청렴도(CPI)와의 상호관련성이 높을 것임을 예견해서 국가청렴도 지수와 원천 자료 간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해 보았다. 이러한 상관분석은 어떠한 원천자료가 부패인식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잣대가 될 것이다.

2012년도 CPI자료 점수와 원천자료점수와의 상호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PERC자료⁵⁾

5) 최근 홍콩 정치경제리스크 컨설턴시(PERC)가 발표한 2013 조사보고서에서 한국은 아시아 선진국 중 최악의 부패국가로 선정됐다.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0점 만점 중 6.98점을 받

($r=0.976$)가 CPI지수와 가장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 순으로 IMD($r=0.946$), WJP($r=0.946$), GI($r=0.945$), EIU($r=0.937$), PRS($r=0.933$), SGI($r=0.928$), WEF($r=0.904$), TI($r=0.893$), BTI($r=0.890$)로 나타났다. 특히 CPI 점수와 상관관계가 가장 높은 PERC의 청렴도 평가의 경우 2013년도에 아시아 선진국 중 최저로 평가되었다.

<표3> CPI와 CPI 원천자료간의 상관관계

		Correlations												
		AFDB	BF (SGI)	BF (BTI)	IMD	PRS	WB	WEF	WJP	EIU	GI	PERC	TI	FH
C P I	Pearson Correlation	.787**	.928**	.890**	.946**	.933**	.868**	.904**	.946**	.937**	.945**	.976**	.893**	.939**
	Sig. (2-tailed)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N	53	31	128	59	140	67	147	97	138	175	15	29	29

출처: <http://cpi.transparency.org/cpi2012/results/#myAnchor1>에서 제시된 자료를 활용하여 상관관계분석을 실시

**, Correlation is significant at the 0.01 level (2-tailed).

a. Cannot be computed because at least one of the variables is constant.

*, Correlation is significant at the 0.05 level (2-tailed).

다만 본 글에서는 부패측정의 원천자료 중 우리나라의 부패수준을 측정하는 자료로 모든 이에게 온라인상으로 공개되어 자료 접근이 용이한 WJP, BF(SGI), WEF, BF(BTI)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한다.⁶⁾

1. World Justice Project Rule of Law Index: WJP

World Justice Project Rule of Law Index(WJP)는 제한된 정부권력(Limited Government Power), 부패의 부재(Absence of Corruption), 기본적 권리(Fundamental Rights), 열린 정부(Open Government), 규제집행(regulatory enforcement), 민사사법(Civil Justice), 형사사법(Criminal Justice), 비공식적 사법(Informal Justice)과 같이 8가지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부패의 부재가 CPI 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아 싱가포르(0.74), 일본(2.35), 호주(2.35), 홍콩(3.77) 등 아시아 선진국들에 비해 두 배 이상 부패한 것으로 나타났다(세계일보, 2013.07.15자, Views&News, 2013.07.15자).

- 6) Transparency International Bribe Payers Survey 2011: TI 자료의 경우 온라인상으로 공개되어 있다고 하나 실제 자료를 검색한 결과, CPI 지수 산정 관련 질문 문항(당신의 입장에서 볼 때 관련 국가에서 공무원의 뇌물을 요구하거나 수용하는 것이 얼마나 보편적인지에 대한 질문과 사적 이익을 위해 얼마나 공공기금의 남용이 발생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어 본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부패의 부재 요인은 행정부 공직자, 사법부 공직자, 경찰 및 군 공직자, 입법부 공직자가 사익을 위해 공직을 활용하지 않는지의 정도로 측정된다. 측정점수는 0점에서 1점까지 부여되는데 0점에 가까울수록 사익을 위한 공직남용이 높으며, 1점에 가까울수록 그럴 가능성이 낮음을 의미한다.

실제 분석결과 총 대상국가 94개국 중 스웨덴(0.96점)의 청렴도가 가장 높고 덴마크(0.95점), 노르웨이(0.94점) 순으로 나타났으며, 동아시아 및 태평양지역에 위치한 14개 국가 중 뉴질랜드(0.92점)가 가장 청렴도가 높으며, 싱가포르(0.91점), 호주(0.90점), 홍콩(0.89점)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소득 국가일수록 청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우리나라는 총 97개국 중 25위, 동아시아 및 태평양지역에 위치한 14개국 중 6위, 고소득 29개국 중 21위를 기록하는 것으로 1점 만점 중 0.74점으로 나타났다. 특히 WJP자료를 통해 직관적으로 보더라도 우리나라가 소득수준에 비해 상당히 부패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부패의 부재에 대한 하위항목을 구체적으로 보면 가장 청렴한 것으로 나타난 스웨덴은 모든 항목에서 거의 1점에 가까움에 따라 모든 공직자가 사적이익을 위해 공직을 남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행정부 공직자의 공직남용 0.74점, 사법부 공직자의 공직남용 0.84점, 경찰 및 군 공직자의 공직남용 0.86점, 입법부 공직자의 공직남용 0.49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공직남용이 행정부 공직자에 비해 1.5배, 사법부 공직자에 비해 1.7배, 경찰 및 군 공직자에 비해 1.8배 높게 나타나 정치인의 부패가 심각하며 정경유착을 통한 권력형 부패의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만약 국회의원의 공직남용 방지 정책을 강화하여 현 입법부 공직남용 점수를 행정부 공직남용 점수인 0.75점 수준으로 올린다면 부패의 부재점수가 0.80점으로 총 조사대상국 97개국 및 고소득국가 29개국 중 13위에서 15위권 정도인 프랑스, 스페인, 영국 수준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4> 2012년 부패의 부재

국가	부패의 부재점수 (Absence of Corruption)					국가 순위	지역 순위	소득 집단 순위
		행정부 공직자의 공직남용	사법부 공직자의 공직남용	경찰 및 군 공직자의 공직남용	입법부공 직자의 공직남용			
Sweden	0.96	0.94	0.96	0.98	0.95	1/97	1/16	1/29
Denmark	0.95	0.94	0.96	0.96	0.95	2/97	2/16	2/29
Norway	0.94	0.94	0.97	0.95	0.91	3/97	3/16	3/29
Finland	0.93	0.95	0.97	0.97	0.84	4/97	4/16	4/29
Netherlands	0.93	0.91	0.93	0.96	0.92	5/97	5/16	5/29
New Zealand	0.92	0.9	0.94	0.95	0.89	6/97	1/14	6/29
Singapore	0.91	0.88	0.92	0.88	0.95	7/97	2/14	7/29

Australia	0.90	0.89	0.94	0.94	0.82	8/97	3/14	8/29
Hong Kong SAR, China	0.89	0.85	0.93	0.9	0.88	9/97	4/14	9/29
Japan	0.84	0.87	0.84	0.9	0.77	10/97	5/14	10/29
Germany	0.82	0.83	0.92	0.88	0.66	11/97	6/16	11/29
Canada	0.81	0.8	0.88	0.85	0.69	12/97	7/16	12/29
France	0.80	0.79	0.84	0.9	0.68	13/97	8/16	13/29
Spain	0.80	0.74	0.84	0.9	0.72	14/97	9/16	14/29
United Kingdom	0.80	0.82	0.87	0.85	0.66	15/97	10/16	15/29
Belgium	0.78	0.78	0.88	0.87	0.6	16/97	11/16	16/29
Uruguay	0.78	0.82	0.81	0.77	0.71	17/97	1/16	1/30
United States	0.78	0.77	0.88	0.83	0.62	18/97	12/16	17/29
Estonia	0.77	0.75	0.86	0.91	0.58	19/97	1/21	18/29
Austria	0.77	0.76	0.88	0.91	0.54	20/97	13/16	19/29
Georgia	0.77	0.76	0.64	0.98	0.7	21/97	2/21	1/23
Botswana	0.75	0.72	0.8	0.77	0.71	22/97	1/18	2/30
United Arab Emirates	0.74	0.76	0.78	0.71	0.73	23/97	1/7	20/29
Chile	0.74	0.78	0.78	0.83	0.56	24/97	2/16	3/30
Republic of Korea	0.74	0.75	0.84	0.86	0.49	25/97	6/14	21/29

출처: Mark David Agrast, Juan Carlos Botero, Joel Martinez, Alejandro Ponce, Christine S. Pratt, The World Justice Project/ Rule of Law Index, pp. 164-165.

2. Bertelsmann Foundation Sustainable Governance Indicators: BF(SGI)

Bertelsmann Foundation Sustainable Governance Indicators는 상태 인덱스(Status Index)와 경영 인덱스(Management Index)로 구성되며, 상태 인덱스는 민주주의(Democracy), 경제/고용(Economy/Employment), 사회업무(Social affairs), 안전(Security), 자원(Resources)을 포함하고 있으며, 경영 인덱스는 운영능력(Steering capability), 정책이행(Policy implementation), 제도적 학습(Institutional learning), 책임성(Accountability)을 포함하고 있다. 이 중 CPI와 관련된 것은 상태 인덱스 중 민주주의의 하위 요소인 법치주의⁷⁾에 포함된 부패예방(Corruption Prevention)이다.

부패예방은 공직자가 자신들의 사적 이익을 위해 직위남용을 방지하는 정도가 어떠

7) 법치주의(Rule of Law)를 측정하는 항목으로 법적 확실성(Legal Certainty), 사법부 임용(Appointment of Justices), 부패예방(Corruption Prevention), 협의의 법치주의(Rule of Law), 부패통제(Control of Corruption)가 존재한다.

한지에 대해 묻는 것으로 국가나 사회가 공직청렴성을 보장하기 위한 메커니즘<국가지출에 대한 회계; 정당자금조달규제; 정보에 대한 시민과 언론의 접근; 공직자 책임성(재산 신고, 이해충돌규정, 행동강령); 투명한 공공조달시스템, 효과적인 부패에 대한 기소>을 적용함으로써 공무원과 정치인이 뇌물수수를 못하게 하는 지의 정도를 평가하는 것이다.

점수는 1점에서 10점까지 주어지는데 가장 낮은 1점에서 2까지의 점수는 공직자가 사적 이익을 위해 그들의 직위를 남용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가장 높은 편인 9점에서 10점까지의 점수는 공공청렴메커니즘이 효율적으로 작동하여 공직자가 그들의 직위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5> Sustainable Governance Indicators의 부패예방 설문문항구성

법적, 정치적, 공공청렴메커니즘이 효율적으로 작동하여 공직보유자가 그들의 직위를 남용하지 못하고 있다	<input type="checkbox"/> 10점 <input type="checkbox"/> 9점
대부분 청렴메커니즘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공직자가 그들의 지위를 남용하는데 불이익이 주어진다.	<input type="checkbox"/> 8점 <input type="checkbox"/> 7점 <input type="checkbox"/> 6점
일부 청렴메커니즘이 작동하나 공직자가 그들의 지위를 남용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방지하지 못한다.	<input type="checkbox"/> 5점 <input type="checkbox"/> 4점 <input type="checkbox"/> 3점
공직자가 법적인 결과나 나쁜 평판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사적 이익을 위해 그들의 직위를 남용할 수 있다.	<input type="checkbox"/> 2점 <input type="checkbox"/> 1점

출처: Daniel Schraad-Tischler, Najim Azahaf, Pia Paulini, 2011, SGI 2011 Codebook: Sustainable Governance Indicators, p.29

SGI는 양적 통계자료(주로 OECD 자료 참고)의 분석과 함께 전 세계의 약 80명의 신뢰할 수 있는 조사자로 구성된 네트워크조직이 수집한 질적 자료를 포함하여 평가 작업을 수행한다. SGI의 부패예방의 경우 OECD 31개 국 중 스웨덴(10점), 뉴질랜드(10점)가 가장 높게 나타나 부패예방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작동하여 공직자의 직위남용 행위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멕시코의 경우 부패예방점수가 가장 낮은 2점으로 나타나 사적 이익을 위해 그들의 직위를 남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OECD국가 31개국 중 22위로 5점대를 기록함에 따라 일부 청렴메커니즘이 작동하나 공직자의 지위 남용을 효과적으로 방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최근(2013년 7월 31일) 국무회의에서 통과한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일명 김영란법)」이 국회에서 계류 중인데 이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직위남용을 통한 청탁행위가 근절될 수 있게 법적 장치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표6> 2011년도 OECD 국가별 부패예방 점수

순위	OECD국가	부패예방(Corruption Prevention)
1	Sweden	10
1	New Zealand	10
3	Finland	9
3	Denmark	9
3	Switzerland	9
3	Canada	9
3	Iceland	9
3	United States	9
9	Norway	8
9	Australia	8
9	Luxembourg	8
12	Germany	7
12	Netherlands	7
12	United Kingdom	7
12	Belgium	7
12	Austria	7
17	Ireland	6
17	Portugal	6
17	Chile	6
17	Spain	6
17	Poland	6
22	France	5
22	Japan	5
22	South Korea	5
25	Czech Republic	4
25	Hungary	4
25	Turkey	4
28	Italy	3
28	Slovakia	3
28	Greece	3
31	Mexico	2

출처: http://www.sgi-network.org/index.php?page=download_2011(검색일, 2013.08.01)

3. World Economic Forum Executive Opinion Survey: WEF

세계 경쟁력 보고서는 신뢰받는 세계 경쟁력의 평가로 전문적 의견 조사에 의해 평가 되었다. 매년 140개가 넘는 국가를 평가하는 이 조사는 국가의 경쟁력과 지속적인 발전의 중요한 요소들을 분석하고 있다. WEF의 국제경쟁력 지수는 크게 세 가지의 하위지수인 기본요건 하위지수(Basic requirements subindex), 효율성 향상 하위지수(Efficiency enhancers subindex), 혁신 및 정교화 요인하위지수(Innovation and sophistication factors subindex)로 구성되어 있다. 기본요건 하위지수로는 제도(Institutions), 하부구조(Infrastructure), 거시경제환경(Macroeconomic environment), 건강과 초등교육(Health and primary education)으로, 효율성 향상 하위지수는 고등교육과 훈련(Higher education and training), 상품시장 효율성(Goods market efficiency), 노동시장효율성(Labor market efficiency), 금융시장진전(Financial market development), 과학기술 준비(Technological readiness), 시장규모(Market size)로 구성되어 있으며, 혁신 및 정교화 요인하위지수는 기업정교화(Business sophistication), 혁신(Innovation)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CPI 점수산정에 활용되는 자료는 기본 요건하위지수 중 제도적 요인과 관련된 다. 제도적 요인 중 공적 자금의 유용(Diversion of public funds)과 비공식적인 추가 지불 및 뇌물수수(Irregular payments and bribes)가 활용되며 두 가지의 평균값이 CPI 점수산정에 이용된다.

좀 더 구체적으로 공적 자금의 유용에 관한 설문은 당신의 나라에서 부패로 인해 기업, 개인 그룹, 공공기금의 유용이 얼마나 보편적인지의 정도를 묻는 것으로 1점부터 7점까지 부여할 수 있는데 1점에 가까울수록 매우 보편적이며, 7점에 가까울수록 전혀 없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비공식적인 추가 지불 및 뇌물수수의 설문은 a)수출입 b)공동 시설 c)납세 d)공적계약 및 라이선스 지급 e) 호의적인 사법적 판단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비자금 조성 및 뇌물수수가 얼마나 보편적인지를 묻는 것으로 1점부터 7점까지 부여할 수 있는데 이 역시 1점에 가까울수록 매우 보편적이며, 7점에 가까울수록 전혀 없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들 a)에서 e)까지 5개의 설문문항은 하나의 점수로 환산된다.

2013년(2012-2013) 조사결과에 따르면 공적자금의 유용과 관련하여 144개국 중 뉴질랜드가 1위로서 7점 만점 중 6.5점, 그 다음으로 덴마크 6.3점, 핀란드 및 싱가포르 6.2점을 기록함에 따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청렴국가라 지칭하는 나라는 공적자금유용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 3.5점으로 58위를 기록했으며 뉴질랜드, 덴마크, 핀란드 및 싱가포르에 비해 각각 1.86배, 1.80배, 1.77배 공적자금유용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우리나라의 공적자금 유용에 관한 2013년 조사결과는 2012년(2011-2012) 조사결과(순위 및 점수)와 동일하게 나타났지만, 2013년도 전체 국가 평균인 3.6점에 비해 낮게 평가 되었다. 또한 WEF 자

료는 우리나라가 중국보다 공적자금의 유용이 더 발생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에 문제가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표7> 2013년(2012-2013) 공적자금의 유용

순위(144개국)	국가	점수
1	뉴질랜드	6.5
2	덴마크	6.3
3	핀란드	6.2
4	싱가포르	6.2
5	스위스	6.0
6	스웨덴	6.0
7	룩셈부르크	6.0
8	네덜란드	5.9
9	카타르	5.9
10	노르웨이	5.9
11	아랍에미네이트	5.7
12	홍콩	5.7
13	영국	5.7
14	캐나다	5.6
15	아일랜드	5.6
16	독일	5.5
17	호주	5.5
18	오만	5.3
19	일본	5.3
20	아이슬랜드	5.3
31	보츠와나	4.7
51	중국	3.7
55	터키	3.6
58	대한민국	3.5

출처: The Global Economic Forum, Executive Opinion Survey,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2-2013, p.390.

참고: 2012년(2011-2012) 조사결과 대한민국의 경우 142개국 중 58위 3.5점을 기록함. 2013년(2012-2013) 조사결과 평가대상국 144개국의 공적자금의 유용 전체 평균은 3.6점으로 나타남.

비공식적인 추가 지불 및 뇌물수수의 경우 2013년(2012-2013) 조사결과에 따르면 144개국 중 뉴질랜드가 1위인 6.7점이며 그 다음으로 핀란드(2위, 6.6점), 싱가포르(3위, 6.6점), 덴마크(4위, 6.4점) 순으로 이들 국가의 경우 비공식적인 추가 지불 및 뇌물수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 50위인 4.5점으로 2012년(2011-2012) 조사결과와 비교해 볼 때 순위가 1단계 낮아졌으며 점수 또한 0.1점 더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공공서비스를 이용이나 규제를 회피하는 과정에서 급행료와 같은 뇌물수수가 아직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위해 비자금과 같이 회사의 비공식적인 자금 조성이 현실에서는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8> 2013년도(2012-2013) 비공식적인 추가 지불 및 뇌물수수

순위(144개국)	국가	점수
1	뉴질랜드	6.7
2	핀란드	6.6
3	싱가포르	6.6
4	덴마크	6.4
5	아이스랜드	6.4
6	아랍에미네이트	6.4
7	룩셈부르크	6.4
8	노르웨이	6.3
9	카타르	6.3
10	스웨덴	6.2
11	일본	6.2
12	네델란드	6.2
13	스위스	6.2
14	아이랜드	6.1
15	홍콩	6.1
16	캐나다	6.0
17	영국	5.9
18	독일	5.9
19	오만	5.8
20	호주	5.8
36	보츠와나	5.0
46	말레이시아	4.7
50	대한민국	4.4

출처: The Global Economic Forum, Executive Opinion Survey,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2-2013, p.392.

참고: 2012년(2011-2012) 조사결과 142개국 중 49위 4.5점을 기록함. 2013년(2012-2013) 조사결과 평가대상국 144개국의 공적자금의 유용 평균은 4.2점으로 나타남.

4. Bertelsmann 재단의 변혁지수(Transformation index)(BF, BTI)

BTI는 128개 국가의 심층평가에 근거해 상태지수(status index), 경영지수(management index)와 같은 두 가지 순위(ranking)를 발표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상태지수는 크게 민주주의, 시장경제로 이루어지며, 경영지수는 경영과 관련된 사항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17개 기준은 민주주의(1. 국가의 정도, 2. 정치참여, 3. 법치주의, 4. 민주제도의 안정성, 5. 정치사회적 통합), 시장경제(6. 사회경제적 발전수준, 7. 시장/경쟁의 조직화, 8. 화폐와 가격 안정성, 9. 소유권, 10. 복지, 11. 경제성과, 12. 지속가능성), 경영(13. 난이도, 14. 운영능력, 15. 자원효율성, 16. 공감대 형성, 17. 국제협력)이며

이 중 민주주의와 관련된 설문문항은 18개, 시장경제관련 설문문항 14개, 경영관련 설문문항 17개이다. 특히 CPI와 원천자료로 활용되는 설문은 민주주의의 하위항목인 법치주의에서 “직위를 남용한 공직자가 기소되거나 형사처벌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와 관련되며 경영의 하위항목인 자원효율성에서 “정부가 부패를 성공적으로 방지하는 정도는 어떠한가?”와 관련된다.

먼저 공직자가 직위를 남용했을 경우 기소되거나 처벌되는 정도의 경우 싱가포르, 대만, 우루과이의 경우 10만점 중 10점으로 공직자가 직위를 남용했을 경우 이에 대한 기소나 처벌로서 부패에 대한 사후적 통제가 확실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 부탄, 보츠와나라는 국가와 마찬가지로 8점을 기록함에 따라 사후적 통제가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9> 2012년 공직남용에 대한 기소

순위	국가	지역	공직남용에 대한 기소
1/128	Singapore	7	10
1/128	Taiwan	7	10
1/128	Uruguay	2	10
4/128	Chile	2	9
4/128	Estonia	1	9
4/128	Slovenia	1	9
7/128	Bhutan	7	8
7/128	Botswana	5	8
7/128	Bulgaria	1	8
7/128	Costa Rica	2	8
7/128	Czech Republic	1	8
7/128	Hungary	1	8
7/128	Lithuania	1	8
7/128	Poland	1	8
7/128	Slovakia	1	8
7/128	South Korea	7	8

Regions:

1. East-Central and Southeast Europe
2.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3. West and Central Africa
4.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5. South and East Africa
6. Post-Soviet Eurasia
7. Asia and Oceania

출처: <http://www.bti-project.org/index/> (검색일, 2013.08.01)

두 번째 질문으로 정부가 성공적으로 부패를 억제하는 정도의 경우 10점 만점 중 싱가포르, 대만, 우루과이, 칠레, 에스토니아가 9점(1위)으로 정부의 반부패정책이 부패를 억제하는데 성공적이라는 평가인데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 8점으로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지역 중 싱가포르와 대만에 비해 청렴정책 및 부패방지 시스템 작동이 뒤처지는 것

으로 나타났다.

<표10> 2012년 정부의 성공적인 부패억제정도

순위	국가	지역	반부패정책
1/128	Singapore	7	9
1/128	Taiwan	7	9
1/128	Uruguay	2	9
1/128	Chile	2	9
1/128	Estonia	1	9
6/128	Slovenia	1	8
6/128	Botswana	5	8
6/128	Costa Rica	2	8
6/128	Lithuania	1	8
6/128	South Korea	7	8

Regions:

1. East-Central and Southeast Europe
2.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3. West and Central Africa
4.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5. South and East Africa
6. Post-Soviet Eurasia
7. Asia and Oceania

<http://www.bti-project.org/index/> (검색일, 2013.08.01)

IV. 요약 및 결론

본 글은 국제투명성 기구에서 평가하는 국가청렴도 지수(CPI)의 원천자료와 CPI 산정에 활용되는 설문문항의 분석과 함께 한국사회의 부패수준이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특히 원천자료의 평가주체가 외국 기업인 또는 외국 전문가로서 우리사회의 부패에 대해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들의 평가결과가 상당한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인식하에 2012년 TI의 국가청렴도(CPI) 평가의 원천자료를 조사한 결과, 총 13개로 이 중 우리의 부패수준을 측정하는 원천자료는 총 10개로 가장 많은 원천자료를 활용하는 국가군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원천자료에서 지수 산정에 활용되는 설문문항을 정리해 본 결과 사적이익을 위한 공직남용의 정도, 공적 자금의 유용과 같이 부패의 개념에 입각한 설문문항이 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부패를 바라보는 정치인 및 공직자의 태도, 부패의 관행화 정도(뇌물이나 비자금 조성에 대한 부패의 관행화·보편화 정도), 부패의 파급효과(부패가 공공기관에 미치는 영향력 정도), 부패실제경험(사업허가나 유리한 정책판단을 이끌어내기 위한 부패경험 정도), 부패의 통제기능(독립적인 회계감사기구나 사법부의 존재, 부패행위에 대한 기소 및 처벌 정도, 정부의 반부패정책의 실효성 정도)과 관련된 질문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World Justice Project Rule of Law Index(WJP), Bertelsmann Foundation Sustainable Governance Indicators(BF, SGI), World Economic Forum Executive

Opinion Survey(WEF), Bertelsmann Foundation Transformation index(BF, TI)에서 CPI 산정에 활용되는 설문문항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부패수준을 분석해 보았다.

첫째, World Justice Project Rule of Law Index(WJP)의 경우 행정부 공직자의 남용, 사법부 공직자의 남용, 경찰 및 군 공직자의 공직남용, 입법부 공직자의 공직남용으로 구성된 부패의 부재(absence of corruption)는 1점 만점(1점에 가까울수록 공직남용의 가능성이 낮음) 중 0.74점으로 총 97개국 중 25위, 동아시아 및 태평양지역 14개국 중 6위, 고소득 29개국 중 21위를 기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패의 부재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행정부 공직자의 공직남용 0.74점, 사법부 공직자의 공직남용 0.84점, 경찰 및 군 공직자의 공직남용 0.86점, 입법부 공직자의 공직남용 0.49점으로 나타나 정치인의 공직남용이 심각하다는 점에서 정경유착을 통한 권력형 부패의 가능성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Bertelsmann Foundation Sustainable Governance Indicators(BF, SGI)의 경우 공직자가 사적 이익을 위해 직위남용을 방지하는 부패예방에 관한 질문문항으로 우리나라는 OECD 31개국 중 22위, 10점 만점(10점에 가까울수록 직위남용을 방지하는 청렴메커니즘이 효율적으로 작동함) 중 5점대를 기록함에 따라 일부 청렴메커니즘이 작동하나 공직자의 직위 남용을 효과적으로 방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셋째, World Economic Forum Executive Opinion Survey(WEF)의 경우 공적자금 유용(1점: 매우 보편적, 7점: 전혀 없음)과 관련하여 최근 2013년도(2012년-2013년) 조사결과 우리나라는 3.5점으로 144개국 중 58위로, 뉴질랜드(1위, 6.5점)에 비해 1.86배나 공적자금유용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공식적인 추가 지불 및 뇌물수수(1점: 매우 보편적, 7점: 전혀 없음)는 최근 2013년도(2012년-2013년) 조사결과 우리나라는 4.5점으로 144개국 중 50위로, 뉴질랜드(1위, 6.7점)에 비해 비공식적인 추가 지불 및 뇌물수수가 1.49배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Bertelsmann Foundation Transformation index(BF, TI)의 경우, 우리나라는 직위를 남용한 공직자가 기소되거나 형사처벌 가능성의 정도(1점: 가장 낮음, 10점: 가장 높음)에 대해 10점 만점 중 8점(128개국 중 7위)으로 평가되어 부탄, 보츠와나와 동일한 수준을 기록했으며, 10점 만점인 싱가포르, 대만, 우루과이에 비해서는 부패에 대한 사후통제수준이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정부의 성공적인 부패억제정도에 대해 10점 만점(10점에 가까울수록 성공적으로 부패를 억제함) 중 8점(128개국 중 6위)으로, 싱가포르(9점, 1위), 대만(9점, 1위)에 비해 낮게 평가되었다.

특히 CPI 평가를 위한 자료들 중에서 한국에 대해 가장 낮은 평가를 한 기관들은 PERC(Political and Economic Risk Consultancy Asian Intelligence), PRS(Political Risk Services International Country Risk Guide), WEF(World Economic Forum Executive Opinion Survey)로, PERC는 47점, PRS는 50점, WEF는 48점으로 한국을 낮게 평가하였다.

PERC는 ‘한국이 아시아 선진국 가운데 부패에 가장 취약하다’며 지적했고, PERC의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기업부패의 점수가 8.76점으로 아시아에서 2위였다. 기업의 뇌물 관행 등이 인도네시아, 필리핀, 중국보다 팽배하다는 뜻이다. 한국보다 기업부패가 심각한 나라는 오로지 인도(9.17)밖에 없었다. 부패 적발 시, 사법 시스템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집행되는가를 묻는 설문에서는 8.87점으로 캄보디아(8.98)만 제외하면 평가 국가 중에 아시아에서 최하위로 평가되었다.

또한, PRS의 평가는 정치 위험, 금융 위험, 경제 위험의 세 가지 주요 범주로 분류하고, 정치 위험 지수 100점, 금융 위험 지수 50점, 경제 위험 지수 50점의 가중치를 측정하는데 정치 위험 지수가 가중치가 가장 높는데 한국은 정치 위험지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한편, WEF의 평가에서 정치인들에 대한 공적신뢰 112위, 정부 정책결정의 투명성 137위, 기업 협회의 효율성 130위, 소수 주주들의 이익의 보호 124위, 은행의 건전성 113위, 노동자-고용주 관계협력 132위로, 공적신뢰의 증가, 정부 정책결정의 투명성의 개선, 경영지배시스템 개선정책이 요구되어지고 있다. 사업에서의 가장 큰 문제요인으로는 금융접근성(16.5%), 비효율적인 관료제(16.1%), 정책불안정(15.2%)의 순으로 평가되었다. 전반적인 글로벌 경쟁력 지수에서 특히 노동시장의 효율성 78위, 금융시장발전 81위, 제도 74위로 이 분야에서 낮게 평가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 기관들에서 지적되어진 낮은 평가를 받은 요소들에 대한 정부의 전략적인 정책 수립을 통해 CPI 지수의 개선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번 연구 결과는 부패측정의 설문자료를 토대로 한국사회의 부패인식제고를 위해 어떠한 노력이 좀 더 필요할지에 대한 반부패정책방향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감사원. (2013). 부패인식 개선을 위한 정부의 역할에 관한 연구.
- 신열. (2008). 국제투명성기구(TI)의 부패인식지수(CPI)분석에 따른 대응과제. 「감사논집」, 76-98.
- 이상환. (2004). 국제적 부패 관련 경험적 연구의 한계와 개선방안: 부패지수를 중심으로, 「세계지역연구논총」, 22(1): 139-163.
- 이상환. (2004). 부패지수 관련 경험적 연구의 한계와 개선방안. 「한국부패학회보」, 9(1):127-149.
- 이상환. (2002). 국제투명성기구(TI)의 부패인식지수(CPI)에 대한 경험적 고찰. 「국제정치연구」, 5(2): 57-79.
- Agrast, Mark D., Botero, Juan C., Martinez, J., Ponce, A. & Pratt, Christine S. (2012). *The World Justice Project/ Rule of Law Index*: 164-165.
- Joint Research Center. (2012), *Corruption Perception Index 2012 Statistical Assessment*: 8.
- Schraad-Tischler, D., Azahaf, N. & Paulini, P. (2011). *SGI 2011 Codebook: Sustainable Governance Indicators*: 29.
- Transparency International. (2012).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2012: Full Source Description*.
- The Global Economic Forum, Executive Opinion Survey, (2013).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2-2013* 390-392.
- Views&News, 2013.07.15자. PERC "한국부패, 지난 10년 중 최악" 태국보다도 부패도 높아, 아시아 선진국 중 최악.
- 세계일보. (2013). 홍콩 PERC, 외국기업인 대상 현지 설문결과 충격. 2013.07.15자
- http://www.sgi-network.org/index.php?page=download_2011(검색일, 2013.08.01).
- <http://cpi.transparency.org/cpi2012/results/#myAnchor1> (검색일, 2013.08.01)
- <http://www.bti-project.org/index/> (검색일, 2013.08.01.)
- <http://www.asiarisk.com>
- <http://www.prsgroup.com>
- <http://www.weforum.org>

투고일자 : 2013. 11. 10

수정일자 : 2013. 12. 18

게재일자 : 2013. 12. 29

국문초록

우리나라 청렴도 수준파악에 관한 연구: 국가청렴도 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산정에 활용되는 원천 자료상의 설문문항을 중심으로

이정주(서울시립대 반부패시스템연구소)
윤은기(동아대)

본 연구는 국제적인 평가지수인 국가청렴도 지수의 원천자료와 한국사회부패를 측정하는데 실제 사용되는 설문문항의 분석과 함께 평가결과에 대한 실태분석을 실시하였다. 특히 실태분석의 경우에, World Justice Project Rule of Law Index(WJP), Bertelsmann Foundation Sustainable Governance Indicators(BF, SGI), World Economic Forum Executive Opinion Survey(WEF), Bertelsmann Foundation Transformation index(BF, TI)에서 CPI 산정에 활용되는 설문문항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부패수준을 분석해 보았다. 분석결과, 첫째, World Justice Project Rule of Law Index(WJP)는 행정부, 사법부, 경찰 및 군 공직자에 비해 정치인의 공직남용이 심각하다는 점에서 정경유착을 통한 권력형 부패의 높은 가능성을 지적하였다. 둘째, Bertelsmann Foundation Sustainable Governance Indicators(BF, SGI)는 공직자가 사적 이익을 위해 직위남용을 방지하는 부패예방에 대해 일부 청렴메커니즘이 작동하나 공직자의 직위 남용을 효과적으로 방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셋째, World Economic Forum Executive Opinion Survey(WEF)는 공적자금 유용이 가장 청렴하다고 평가받는 뉴질랜드에 비해 1.86배나 공적자금유용이 많이 발생하며 뇌물수수의 경우도 1.49배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넷째, Bertelsmann Foundation Transformation index(BF, TI)의 평가에서, 우리나라에서 직위를 남용한 공직자가 기소되거나 형사처벌 가능성의 정도는 싱가포르, 대만, 우루과이에 비해 부패에 대한 사후 통제수준이 낮게 나타났으며, 정부의 성공적인 부패억제정도 또한 싱가포르와 대만에 비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제어 : 국가청렴도 지수, 국가청렴도 원천자료, 국가청렴도 측정 설문문항